

## 한변, 박원순 성범죄 고소사실 유출 및 범죄 은폐 관여자들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의공개금지 위반, 성범죄 방조죄 고발

일시 '20. 7. 15.(수) 11:00

장소 대검찰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실이 실시간으로 가해자인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 측에 고소사실을 알려거나 암시한 적이 없고, 고소 당시 수사 담당자에게도 절대보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고,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개탄했다.

박 전 시장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9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수사 초기 고소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본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공개금지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방조(幫助)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피해 여성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비서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로 보는 반응 등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한변은 지난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절구가 묻혀서는 안 되고, 고소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변은 경찰, 청와대 내의 고소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의 범죄은폐, 방조혐의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공개금지 위반,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20. 7.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